Vol. 22

주간 농업농촌동향

2018. 5. 28.

▌정책동향

- 2018년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확정 등

▌아젠다발굴

- **이슈 브리프** ▌중국 '농업 굴기'의 배경과 전망
- **일본 농업·농촌 동향** ▌일본 농림수산성 2017년도 식료·농업·농촌백서
- **언론 동향** ▌38년 만에 발의한 개헌안 국회 의결 무산 등

▌통계·조사

- 2017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 등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

정책동향 2018년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확정

자료 : 기획재정부 · 농림축산식품부(2018.5.21.) · 행정안전부(2018.5.23.)

❑ 개요

○ [2018년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확정, 5.21.]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2018년 추경예산안이 5.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 (주요 내용) 국회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3,985억 원을 감액하고 +3,76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정부안에 편성했던 목적예비비 2,500억 원 중 2,000억 원을 개별사업으로 전환하여 추경 전체규모는 △219억 원이 순감, 재정수지는 정부안보다 소폭 개선

▌재정 총량표(단위: 조 원, %) ▐

구 분	2017년 결산	2018년 본예산	2018년 추경		증감(B-A)
			정부안(A)	확정(B)	
◇ 총 수 입	430.6	447.2	447.7	447.7	-
(증가율)	(7.2)	(7.9)	(8.1)	(8.1)	
◇ 총 지 출	406.6	428.8	432.7	432.7	△0.02
(증가율)	(5.6)	(7.1)	(8.0)	(8.0)	
▪ 재정수지	18.5	△28.5	△31.5	△31.4	+0.1
(GDP대비, %)	(△1.1)	(△1.6)	(△1.7)	(△1.7)	
▪ 국가채무	660.7	708.2	700.5	700.5	-
(GDP대비, %)	(38.2)	(39.5)	(38.6)	(38.6)	

❑ 주요 증액 내역

○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추가※※로 지정을 신청한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총액으로 편성했던 목적예비비 중 2,000억 원을 개별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지원을 더욱 확대

※ (旣지정) 고용위기: 군산, 목포·영암, 거제, 창원, 울산, 통영, 고성 / 산업위기: 군산

※※ (추가 신청) 산업위기: 거제, 창원, 울산, 통영·고성, 목포·영암·해남

-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투자촉진보조금·임대용지 조성 등 투자유치 지원 +340억 원, △지역 관광자원 확충 등 관광지원 확대 +260억 원, △도로·어항·환경시설 등 지역 인프라 지원 +820억 원, △실직자 생계 지원을 위한 희망근로 한시 시행 +121억 원

- (조선·자동차 업종 및 협력업체 지원) △자동차부품업체 및 조선기자재업체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업종전환·판로개척 R&D 지원 +580억 원, △협력업체 수출 지원 및 자금공급 확대 +600억 원

정책동향

○ 최근 신청이 급증하여 예산 조기 소진이 예상되는 **청년내일 채움공제 +528억 원**(4만 명분) 반영 등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소요**도 **증액**

○ **기초수급자 의료·양곡 지원 +653억 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248억 원, 노후공공임대주택·초등돌봄교실 시설개선 +410억 원, 어린이집 보조 교사 확충 +100억 원 등 **민생 관련 주요 정책소요**도 **반영**

○ **[향후 계획]**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8년 추경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

- 추경안이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인 5.21일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

-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기재부 2차관 주재)를 통해 추경예산 **집행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 내역(단위: 조 원)▐

구 분	2018년 본예산	2018년 추경예산	
		정부안	확정
◇ 총지출	428.8	432.7	432.7
1. 보건·복지·노동	144.7	145.7	145.8
2. 교육	64.2	64.4	64.4
3. 문화·체육·관광	6.5	6.5	6.5
4. 환경	6.9	7.0	7.0
5. R&D	19.7	19.7	19.7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3	18.2	18.2
7. SOC	19.0	19.1	19.1
8. 농림·수산·식품	19.7	19.8	19.8
9. 국방	43.2	43.2	43.2
10. 외교·통일	4.7	4.7	4.7
11. 공공질서·안전	19.1	19.1	19.1
12. 일반공공행정	69.0	69.1	69.1

농식품부 2018년 추경예산 주요 내용

○ **[농식품부, 2018년 추경예산 규모 총 710억 원 수준※, 5.21.] 2018년 추경 예산 확정**으로 **농업·농촌 분야**에 **총 71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

- **(주요 내용)** △청년들의 **영농 창업**을 **활성화**하고, **보다 쉽게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빈번한 재해 피해**와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 **농업생산기반 투자**를 **확대**하여 재해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중점

정책동향

<청년 영농창업 지원>

○ 창업 초기 청년들에게 월 최대 100만 원의 생활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예산 9억 9,000만 원**이 **추가**

- 당초 올해 사업 대상자로 선발 예정이었던 1,200명에 400명을 추가

○ 보다 많은 청년 창업농에게 농지를 임대해주기 위해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 예산**을 **600억 원 증액**

- 신규 창업농에게 제공할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 임대형 비축농지 300㏊를 추가로 매입하여 지원

○ 청년 창업농이 시설농지 등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경영자금을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농업자금 이차보전 사업'**을 **4억 5,500만 원 확대**

- 이는 청년 농업인을 지원하는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자금' 1,200억 원을 추가함에 따른 이차보전 소요를 반영

○ 영농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이 농업법인에서 실무 연수를 통해 영농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도록 **'농업법인 취업지원' 예산 4억 8천만 원**을 **추가**

-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중 150명에게 3개월간 농업법인 인턴 기회를 제공하고, 이후 영농정착, 창업 지원까지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

<지역경제 활성화>

○ 항구적인 가뭄·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농업 생산기반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계획

-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구축을 위해 **'대단위농업개발 사업'**에 **80억 원**을 **추가 지원**하여 **용수공급시설**을 **조기**에 **구축**

- **상습침수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로** 등을 **설치**하고, 논에서의 타작물 재배기반을 조성하는 **'배수개선 사업' 예산**도 **11억 원 증액**

▌농식품부 2018년 추경 예산 반영 현황(단위: 백만 원) ▐

세부 사업명	2017년 예산	2018 예산		비 고
		본예산	추경(순증)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	-	7,359	+990	청년 창업농 400명 추가지원
맞춤형 농지지원	180,000	254,000	+60,000	임대용 비축농지 매입 확대(+300ha)
농업자금 이차보전 (후계농업경영인육성)	14,121	15,417	+455	후계농업인 육성자금 지원 확대 (+1,200억 원)
농업법인 취업지원	-	930	+480	농업법인 취업지원 150명 추가
대단위농업개발(농지)	7,500	5,300	+8,000	
배수개선	2,915	2,778	+1,100	
추경 증액 총계(백만 원)			+71,025	

행정안전부 2018년 추경예산 주요 내용

○ [행정안전부, 시·도 및 시·군·구 부단체장 긴급 영상회의 개최, 5.23.] 2018년 추가경정 예산안의 국회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행정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 시·군·구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개최

- (주요 내용※)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정부의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고, 정부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신속한 사업추진과 추경안 편성·집행을 요청

※ 특히 이번 추경에 반영된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831억 원), 「고향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60억 원), 「희망근로 지원 사업」(122억 원)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약 1만 2천개의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당부

▌행정안전부 2018년 추경 예산 반영 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신규, 831억 원)〉
- 지자체 우수 청년일자리 사업의 국가시책 사업화를 통해 2018년 약 1만 명, 2018~2021년간 7만 명 이상의 지역 청년일자리 창출

〈고향사랑상품권 발행지원(신규, 60억 원)〉
- 고용위기지역 등의 고향사랑 상품권 할인발행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비 장려 및 지역상권 활성화 유도

〈희망근로 지원 사업(신규, 122억 원)〉
- 고용위기지역 등의 취약계층을 위한 한시적 일자리(1,910개) 창출을 통해 생계안정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이와 함께 민선7기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5.23.~24.)이 시작되는 시점에 맞추어 지자체의 권한대행 체제 운영 시 지방행정 공백 방지를 위한 협조사항을 전달

▌주요 협조사항▐

① 상반기 중 추진이 필요한 주요 국정 현안의 차질 없는 수행
② 법정 선거사무 추진 철저(거소투표 신고 접수 · 신고인 명부 작성 등)
③ 엄정한 공직 기강 확립
④ 서민생활 안정대책 강구
⑤ 재해 · 재난 대응 및 안전사고 예방
⑥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 불편 · 불만 최소화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개시 공식 선언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8.5.26.)

○ [산업통상자원부,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rade Agreement) 협상 개시 공식 선언, 5.25.]
한-메 양측 장관들은 **무역협정(TA) 협상개시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에 **서명**※※※함으로써 14년에 걸쳐 진행되었던 사전 협의를 마무리하고 양측 수석대표 간 **협상 출범**에 **합의**

※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나, 메르코수르측 요청을 반영하여 '무역협정(TA: Trade Agreement)'으로 지칭

※※ 참석자: (한국 측)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김기준 FTA교섭관(협상 수석대표) 등, (메르코수르 측) 브라질(알로이지우 누네스 페헤이라 외교장관, 마르꾸스 조르지 지 리마 산업통상서비스장관), 아르헨티나(호르헤 마르셀로 포리 외교장관), 파라과이(엘라디오 로이사가 외교장관), 우루과이(로돌포 닌 노보아 외교장관) 등

◈ **메르코수르(MERCOSUR)**: 브라질 · 아르헨티나 · 파라과이 · 우루과이 · 베네수엘라 5개국으로 구성된 남미공동시장(Mercado Comun del Sur)으로, 한-메 TA 협상은 회원국 의무 불이행으로 자격 정지 상태인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4개국과 진행될 예정

〈공동선언문 주요 내용〉

◈ 예비협의의 성공적 종료를 선언(announced the successful conclusion)
◈ 상반기 중 협상개시를 위한 국내절차 착수에 합의(agreed to initiate, in the first half of 2017, their internal procedures with a view to launching a TA negotiation)

- **(한-메르코수르 비즈니스 포럼 개최※, 5.25.)** 서명식 직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한-메르코수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 남미진출에 관심을 가진 우리 기업인들과 메르코수르의 **비즈니스 환경** 및 **한-메 TA 체결 시 확대**될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

※ (참석자) 산업통상자원부, 메르코수르 4개국 장관 및 대표단, 4개국 주한대사 및 외교관, 우리 기업인 등 150여명

-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협상 수석대표 회의 개최※, 5.26.)** 향후 **협상일정** 및 **협상 세칙**(TOR: Terms of Reference)에 대해 **협의**, **(한국 측)** 향후 협상과정에서 상품·서비스·투자, 규범 및 비관세장벽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기업들의 **남미시장 접근성 개선**을 추구하는 한편, **국내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최대한 수렴**, **우리 입장**에 **적극 반영**할 계획

※ 참석자: (한국 측) 김기준 FTA교섭관, (메르코수르 측) 브라질 오덴브라이트 국장, 아르헨티나 레이세르 차관, 파라과이 아발로스 차관, 우루과이 수까시 국장

농식품부, '사회적 농업 협의체' 발족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8.5.24.)

○ [농식품부, '사회적 농업 협의체※' 발족※※, 5.23.]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해 현장과 학계간의 긴밀한 협의를 이끌고자 '사회적 농업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범사업 조직과 전문가 간 협의체계를 구축

※ 협의체에는 올해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9개 조직(주간농업농촌동향 Vol 19, 2018.5.8., 정책동향 "2018년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대상자 9곳 선정" 참고)과 농촌·복지 전문가 5인이 참여

※※ 5.23일 시범사업 현장인 충남 홍성군 '행복농장'에서 첫 회의를 개최, 시범사업 조직들이 각 지역사회에서 해결하고자 마련한 사회적 농업 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협의체 운영 방안을 논의

◈ 사회적 농업: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농업을 통해 장애인 · 고령자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 사람들에게 돌봄 · 교육 · 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제반 활동을 말함. 다만, 이러한 활동은 그 중심에 농업이 있지만, 돌봄 · 교육 등 그 내용이 다양한 영역에 이르기 때문에 지역 학교 · 복지시설 · 농업인 · 지역주민 등 다양한 사람들의 협업을 바탕으로 이루어짐.

- (향후 계획) △각 사회적 농업 조직을 담당할 전담 전문가를 매칭, 앞으로 상시 교류함으로서 한국형 사회적 농업 모델을 만들고, △현장에서 사회적 농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벤치마킹할 계획

◈ 선정된 전문가들은 지정된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과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개별 컨설팅을 진행
  - 시범사업 조직은 사회적 농업 참여자 각자의 특성(참여 동기, 장애 정도, 농업 숙련도 등)을 고려해 체계화된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 사회적 농업 목적 달성을 위해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해야 할 지역 자원을 추가 발굴해 네트워크의 확장을 지원하고, 관심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사회적 농업을 전파

◈ 또한 전문가들은 각 조직에 밀착해 올해 시범사업 과정의 성공과 실패를 기록하여 사회적 농업 모델 구축 연구에 활용

- (기대 효과) 올해 협의체에 참여하는 사회적 농업 조직은 9곳이지만, 향후에는 전국 단위 네트워크로 성장하여 새로운 사회적 농업 실천 조직들에 대한 멘토링·지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농촌진흥청, '농산물안전위생연구회' 창립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8.5.24.)

○ [농촌진흥청, '농산물안전위생연구회※' 창립, 5.24.] 최근 5년간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을 일으킨 식품 중 채소류 비율은 41.8%로 농산물의 위생적인 생산과 유통이 요구되어 왔고, 농산물 생산, 수확, 저장, 가공 및 유통 현장에서 안전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농산물안전위생연구회'를 창립

※ 농식품 안전 관련 정책 연구 전문가와 소비자, 생산자 등 200명으로 구성

- (목적) △GAP 및 위생관리기술 정보교류 및 관학연 네트워크 구축, △농산물 위생관리 연구개발 발전방향 및 R&D 발굴
- (주요 내용) △농산물 위생과 안전 관리 기술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며 산·학·관·연 협력 체계를 구축, △중·장기적인 농산물 위생과 안전 관리에 필요한 연구 개발(R&D) 과제를 찾아내 개발한 기술을 정책과 농업 현장에 적극 확산, △1년에 두 차례 학술행사, 산·학·관·연 합동 농산물 생산 현장 기술 지원, 농산물 위생과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 등을 추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및 논 타작물 재배 신청 필지 대상 이행점검 실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8.5.21.)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및 논 타작물재배 신청필지 대상 적합여부 점검, 5.2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직불금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해당 필지를 확인하고자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이행점검을 실시

※ 직불금 신청현황(5.17.기준): 쌀 818천 명/828천ha, 밭 596/290, 조건불리 143/95

※※ 2018년 논 타작물 신청현황: (두류) 9,122ha, (조사료) 14,844, (일반) 10,477

- (주요 내용) △점검기간··2018.5.23.~8.24.(논 타작물: 10월 말까지), △점검방법··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를 선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과학적·효율적 점검을 위하여 전자지도(팜맵) 및 무인항공기(드론)를 일부 활용, △점검내용··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고정직불금), 논벼 재배 여부(변동직불금), 논벼 대신 타작물 재배 여부(논 타작물재배) 등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농업용 드론교육 실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8.5.21.)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농업용 드론의 이해 및 활용」 교육과정 운영, 5.21.] 농업분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기술인 드론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용 드론의 이해 및 활용」 과정 신설·운영

- (주요 내용) △교육일자··(1회) 2018.5.23.~5.25, (2회) 2018.10.10.~10.12., △교육대상··농식품부·지자체 공무원 등 50여명, △프로그램 구성※··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드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드론조정 및 운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

  ※ 특히, 항공법·항공역학 등 드론에 대한 이론교육과 기본동작인 이·착륙, 제자리, 사각·원형 패턴비행 등 실습 위주로 진행하여 교육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

- (향후 계획) 미래 신기술을 토대로 농식품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

산란계 농가 계란 수거·검사 부적합 계란 회수·폐기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식품의약품안전처(2018.5.21.)

○ [산란계 농가 계란 검사 결과, 부적합 계란 회수·폐기, 5.21.] 지난 8월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계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0.10일부터 살충제 검사항목을 확대※(27종 → 33)하여, 산란계 농가에 대한 점검과 검사 실시

  ※ (기존) 27종 → (확대) 33으로 확대, 특히 기존 27종 중 피프로닐 등 2종의 살충제에 대해서는 가축의 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사물질(피프로닐 설폰 등)도 검사토록 검사방법 개선

- (조사 결과) 닭 진드기가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7~8월)에 대비하여 5.10일부터 계란 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전남 나주 소재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피프로닐의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를 초과·검출되어 부적합 판정※

  ※ 계란의 피프로닐(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 포함) 잔류허용기준: 0.02mg/kg

▌유통계란 검사결과 부적합 세부내역▐

검사기관	농가명(농장주명)	주소	검출량 (mg/kg)	난각코드
전라남도	금천양계 (나0환)	전남 나주시 공산면 복용리 68-1	0.07	SR8MD

※ 검출량은 모두 피프로닐의 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임.
※ 기준(0.02mg/kg): 피프로닐 잔류량 + 피프로닐 설폰잔류량을 피프로닐로 환산(환산계수 0.96)하여 합산
※ 피프로닐 설폰은 피프로닐(살충제 성분)이 가축의 대사과정을 통해 발생하는 대사물질

정책동향

- **(조치 사항)**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 차단**, △해당 농가 **출하 중지**,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 적용, △**농약 불법 사용**이 확인되면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

  ※ 부적합 농가의 계란은 3회 연속 검사 합격 후 2주 후 3회 연속검사

▌부적합 계란의 생산농가 및 난각표시 정보▐

계란정보	난각표시 사진
• 생산농가(소재지): 금천양계(전남 나주) • 난각표시: SR8MD	

아젠다발굴 중국 '농업 굴기'의 배경과 전망 등

이슈 브리프 중국 '농업 굴기'의 배경과 전망

※ LG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중국 '농업 굴기'의 배경과 전망" (LGERI Report, 2018.4.30.)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작성하였습니다.

<중국 정부의 농업 굴기>

❍ [농촌진흥 최우선 과제] 중국의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중앙 1호 문건의 주제는 삼농(농민·농촌·농업)이었고, 올해 역시 기존의 정책 기조를 이어받아 농촌 진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

❍ 2018년 중앙 1호 문건인 '농업진흥전략 실시에 관한 의견'은 농업을 지속가능한 혁신적인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농민들의 사회적 지위를 개선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함.

- 이를 달성하기 위해 농촌 지역의 산업, 환경, 문화, 자치, 민생 등 5개 영역에서 각각 산업 진흥, 생태환경 개선, 문화 진흥, 효율적 농촌 거버넌스 구축, 생활수준 향상을 달성하고, 그 중 산업 진흥 영역에서 주요 과제들에는 농업 생산 기반 확충, 친환경·고품질농업 발전, 6차 산업화, 농식품 수출 및 해외농업투자 확대, 소농경영 안정 등임.

❍ 중국은 2020년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자, 13차 5개년 규획※이 완성되는 해이며 1953년 처음으로 1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당시부터 13차 5개년 규획(2016~2020년)에 이르기까지 식량 정책의 목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경제발전에 대한 중·장기적 목표와 방향을 설정

❍ 중국 정부는 13차 5개년 규획이 마무리되는 2020년에 모든 국민이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의 샤오캉(小康) 사회※ 완성※※을 공식 천명할 계획

※ 샤오캉 사회: 물질적으로 안락하며, 중앙과 지역의 발전 양극화가 일정 부분 해소되어 의식주를 걱정 하지 않는 사회로서 중등 소득 수준 이상의 국가를 의미

※※ 공산당 창당 100주년(2020년)까지 샤오캉 사회 건설, 신중국 성립 100주년(2049년)까지 부강한 사회주의를 완성하는 따통(大同) 사회 건설 목표, 샤오캉 사회는 중국이 2020년까지 건설을 목표로 하는 사회상으로서 장쩌민 국가 주석이 2002년 16차 당 대회에서 처음 언급하면서 중국 발전의 상징어로 사용

아젠다 발굴

- 샤오캉 사회 건설을 위한 **10대 임무**※ 중 하나가 **농업 현대화**인 만큼, 중국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최대 걸림돌인 **삼농 문제 해결**에 **더욱 주력**할 것으로 예상

  ※ 중고속 성장, 포용적 성장(분배), 국민소득 향상, 첨단산업 발전, 소비 위주로의 성장 전환, 도시화율 확대, 농업 현대화, 민생 개선, 빈민 구제, 생태 환경 보호

〈중국의 식량 관련 이슈〉

○ **[식량안보, 국가 최우선 과제]** 중국은 인구 대비 좁은 **경지 면적, 낮은 토지 생산성** 등 **농사**에 **불리**한 **자연 환경** 때문에 **식량 이슈**에 특히 **민감**함.

- 이에 중국 정부는 중국 정부는 **낮은 토지 생산성, 부족한 인프라** 등 자국 내 생산만으로는 수요 충족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수입 또는 해외 농장**에 대한 **소유권 확보** 등을 통해 **곡물**을 **적극적**으로 **비축**하고 있음.
- 정부는 미곡뿐만 아니라 **밀, 옥수수, 대두, 감자, 고구 마, 잡곡** 등 **다양한 곡물**에 대한 **적극적인 비축**을 통해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중국이 **연간 소비량**의 **40~60%**에 달하는 **식량**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UN 권고 안전 비축량: 17%).

○ **[달라지는 중국인의 소비 니즈]**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인들**의 **소득 증가**와 함께 **식생활**이 빠르게 **서구화**되고, 식품의 종류와 함께 **품질**에 대한 **요구** 역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식량 안보는 단순히 배고픔을 벗어나는 것이 아닌, **중국인들**의 **변화된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이슈**로 **확대**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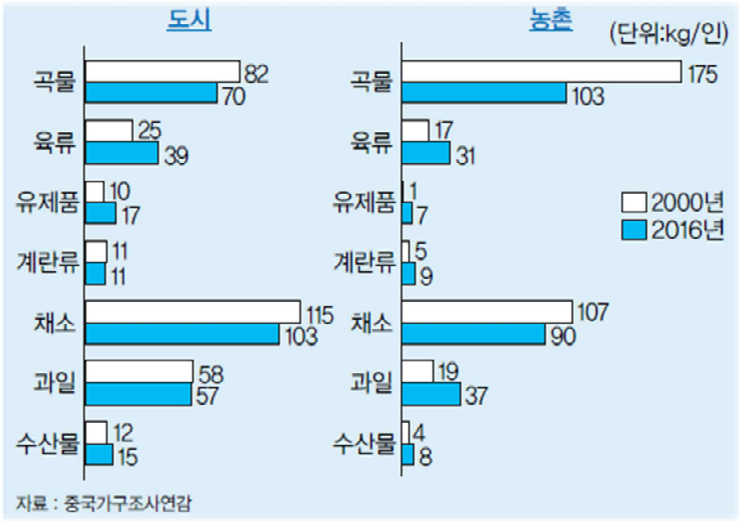
- 2000년대 들어서면서 **소득 증대**와 함께 **중국인 1인 당 식품 소비 지출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도·농간의 소득 격차가 줄면서 **농촌 지역**의 **식품 소비 역시 빠르게 서구화**되어 **유제품, 육류** 등 **축산물**과 **수산물**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음.

▌중국의 농식품시장 성장 추이▐



아젠다 발굴

▌중국의 식품 소비구조 변화▐



- **'건강과 안전'**을 **중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중국 식품시장 트렌드**는 **저칼로리, 저지방, 저당분**으로 **발전**해가고 **유기농 식품** 등 **친환경 먹거리**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식품소비 전문가들은 "중국 소비 시장이 양적인 수준뿐만 아니라 **질적**인 **수준**에서 **발전**하면서 **식품 수급 구조**의 **불균형**이 **커지고** 있다" 며 "**고품질 식품**의 **공급 부족**은 **다른 국가**에 **수출**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고 말함.

〈중국의 대응〉

❍ **[중국 정부, 생산 능력 회복을 위한 국가 정책]** 과거 중국 정부의 농업정책은 작물보호제와 비료를 과다하게 사용하여 수확량을 늘리는 등 생산성을 강조한 결과 생산량 증산에 비해 **토양과 수질**이 **심각**하게 **오염**됨. 최근 **영농 기계화**와 **우수 품종 육성** 등 **생산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노선**을 **변경**하고 있음.

- 중국 농업부는 **2014년부터 종자 산업 발전, 농업 기계화, 농업 과학기술 혁신 플랫폼 기지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양링구**를 **농업 첨단 기술 시범지구**로 **지정·개발**하여 **스마트 농업**을 **구현**함.
- 또한 과거 **GMO**를 불허하던 입장에서 최근 **적극적인 지원**으로 **유전자 관련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현재 **유전자변형생물안전증서**를 **발급 받은 작물**은 **면화, 벼, 옥수수, 파파야** 등 **4개**이며, 이 중 중국 내에서 **상업적 재배**가 **승인**된 **작물**은 **면화**와 **파파야**

아젠다 발굴

▌중국 유전자 변형 기술 현황▐

구분	주요 내용
유전자 변형 병충해저항성 면화 연구개발 및 산업화	• 미국에 이어 유전자 변형 병충해저항성 면화의 지식재산권 보유 • 중국산 병충해저항성 면화 품종의 중국시장 점유율: (1999) 5% → (2015) 95% • 최근 제2대 유전자 변형 면화의 섬유 품질 개량에서 성과 획득
유전자 변형 신품종의 산업화	• 유전자 변형 곤충저항성 벼, 생산안전증서 획득(2009년) • 8개 신품종 생산성실험 단계에 진입하여 산업화 조건 구비 • 4개 신품종 생산성 실험 단계 완료
핵심기술 혁신능력 제고	•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육종 가치가 큰 다수확·병충해저항성 등 핵심 유전자 100여개가 유전자 변형 생물 물질 개발에 응용 • 2012~2013년 동안 벼 유전자클론 관련 발표된 연구 논문의 68% 차지 • 벼와 밀의 유전자 재조합 핵심기술 혁신

자료: 중국유전자변형기술연구현황(민주 및 과학, 2015.5.)

▌세계 유전자변형 작물 재배 현황▐

순위	국가	면적(백만 ha)	작물
1	미국	72.9	옥수수, 대두, 면화, 유채, 사탕무, 거여목, 파파야, 호박 감자
2	브라질	49.1	대두, 옥수수, 면화
3	아르헨티나	23.8	대두, 옥수수, 면화
4	캐나다	11.6	유채, 옥수수, 대두, 사탕무, 거여목
5	인도	10.8	면화
6	파라과이	3.6	대두, 옥수수, 면화
7	파키스탄	2.9	면화
8	중국	2.8	면화, 파파야, 백양나무
9	남아공	2.7	옥수수, 대두, 면화
10	우르과이	1.3	대두, 옥수수

자료: ISAAA(국제농업생명공학정보서비스, 2016년)

❍ [자국의 식량 공급원을 글로벌로 확장] 중국 정부는 **국영 기업**의 **글로벌 농업 기업 인수**, **글로벌 농산물**의 **물류 역량 확대**, **해외 식량 구매**나 **소유권 확보** 등을 통해 **전 세계**로 **식량 공급원**을 **확장**하고 있음.

- 글로벌 인수 외에도 중국 국영 기업들은 **미국**, **칠레**, **브라질**, **러시아**,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호주** 등의 **국가**에 직접 **농업 투자**를 하고 있고, **해외 농지**를 **구입**하거나 **현지 농식품 기업**과의 **제휴**를 **적극 추진**하면서 자국의 **식량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위**를 **강화**함.

아젠다 발굴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 안전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니즈, 정부 주도 하에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업 현대화 등의 환경 변화 속에서 스마트 농업이 중요한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음.

- 특히 그 중에서도 센서와 빅데이터, 과학적인 예측, 농업용 로봇, 농업용 무인기, 농촌 전 자상거래 분야가 주요 유망 발전 분야로서 향후 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 관련 분야에서 기회를 찾으려는 기업들도 증가하고 있음.

※ 중국 스마트농업을 주목하라(KOTRA 2016년 11월)

〈시사점〉

○ 중국 농업 굴기의 일차적인 목표는 '식량 안보'로서 중국 정부는 향후에도 적극적인 곡물 수입, 해외 농지 구입, 곡물 관련 기업 인수 등을 통해 식량 자급률을 높일 전망

- 농업 굴기의 노력은 단순히 자국의 식량을 확보하는데 그치지 않고 농업을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산업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큼.

○ '농업 선진화'를 위한 기반 마련으로서 중국 정부는 자국 농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힘을 쏟고 있음.

○ 스마트 농업을 위한 R&D와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뛰어난 기술력과 제품을 갖고 있는 해외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에 비해 중국 정부가 목표로 하는 '농업 선진화'에는 훨씬 못 미치고 있음.

- 새로운 발전 모델인 스마트 농업이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었고, 농업이라는 산업 특성상 단기간 내에 역량을 높이 끌어 올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며, 더욱이 중국의 경우 자국 내 관련 인력·기업·서비스 모두 부족한 상황

- 따라서 농업 경쟁력이 일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 중국 정부는 지원 또는 정책을 통해 해외의 유수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전망

○ 중국 농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외국 기업이 참여할 기회가 증가하고 있지만 자국 산업 보호 정책, 중국 기업들의 빠른 모방 등으로 외국 기업들이 늘 신중하게 접근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식량 안보와 직결되어 있고, 자국 농민을 보호해야 하는 성격이 강한 농업 역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

- 농업 재배 영역은 오랜 경험을 통해 습득한 노하우가 핵심 역량의 기반이 되고, 이는 경쟁자가 모방하기 어렵다는 장점을 갖고 있음. 또한 시장에서 한번 쌓은 reference는 새로운 해외 시장으로서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신규 진입자들이 넘기 힘든 진입 장벽이 됨.

아젠다 발굴

○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농업 육성 정책 하에서 국영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들**을 **인수**하여 **글로벌 player**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고, **중국 소비자들**의 **식습관**의 **변화**와 함께 점점 **품질**에 대해 **엄격**해지고 있으며, **새로운 아이템**과 **비즈니스 모델**을 **장착**한 **다양한 기업들**이 **등장**하여 달라진 **소비자 니즈**를 **공략**함.

- 이처럼 **다양한 변화** 속에서 **농업 관련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고, **시장 참여 기회**는 **외국 기업들**에게도 **열리고** 있음.
- 경쟁자가 모방하기 힘든 자신만의 확고한 핵심역량을 갖고 있고, 한해 농사가 달려있기 때문에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농민들로부터 인정**받은 **기업들**에게, 중국은 **도전**해 볼만한 **매력적**인 **시장**

일본 농업·농촌 동향 일본 농림수산성 2017년도 식료·농업·농촌백서

※ 일본농업신문 「規模拡大 若手けん引 労働力 基盤対策に課題 １７年度農業白書閣議決定」(2018.5.23.) 보도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였습니다.

일본 농림수산성 2017년도 식료·농업·농촌백서

○ **[2017년 식료·농업·농촌백서 공표, 5.22.]** 일본 정부는 5.22일 **2017년도 식료·농업·농촌백서**를 공표하기로 **내각회의**에서 **결정**했음.

○ **젊은 농가**의 **경영규모**(벼농사)가 **최근 10년**에 **1.5배 늘어**나고, **농업 산출액**이 **2년 연속 증가**한 것이 아베정권의 **「공격적 농정(攻めの農政)」**의 **성과**라고 강조함.

○ 생산현장에서 **노동력 감소**나 국내의 **생산기반 약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깊은 대응이 부족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옴.

○ 이번 백서에서는 **49세 이하**의 **농업후계자**나 **후계자**가 있는 **경영체**(젊은 농가)를 **모집**하여 **경영구조**를 **분석**함.

- **(벼농사)** 2015년까지 10년간 1호당 경영규모가 젊은 농가는 기존의 1.5배인 **7.1ha**가 되었으며, **젊은 농가 이외**에는 거의 **변화**가 **없음**.
- **(10a당 노동 시간)** 논 작업에서는 **2013~2015년**의 3개년 평균이 **34시간**으로 **농업 후계자** 이외와 **비교**하면 **60% 수준**이 되는 등 **효율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였음.

○ 49세 이하의 농업주나 법인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복수응답)를 한 결과, 현재 **경영 과제**로는 **「노동력 부족」**이 **47.3%**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품질에 맞지 않는 판매가격」**이 **34.8%**로 나타났음.

아젠다 발굴

▌2017년도 식료・농업・농촌백서 포인트▐

특집 차세대를 이을 젊은 농업인의 모습

젊은 농가의 경영동향을 분석하여, 규모확대 등이 진행 중인 현황을 해설하고 경영 현황이나 향후 전개에 관한 설문 결과도 게재

토픽 1 농업 산출액이 2년 연속 증가, 한층 더 발전을 향해 해외시장도 고려

2016년 농업 산출액은 2년 연속 증가한 9.2조 엔으로, 16년 만에 9조 엔대로 회복한 것을 소개. 식료 수요는 세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여 일본의 농가가 수출에 대응할 좋은 시기라고 해설

토픽 2 일본-유럽 EPA 교섭 타결과 대책

2017년 12월에 타결한 일본-유럽 EPA 교섭 합의 내용과 농업부분 대책을 해설

토픽 3 일본근대화에 크게 공헌한 양잠

메이지기(明治期)에 성행했던 생계수출이나 교훈

토픽 4 움직이기 시작한 농박(農泊)

일본에 온 외국인들이 농촌에 장기 체류하는 「농박」에 대하여 추진시책이나 실천할 지역의 동향 소개

출처:일본농업신문

○ **효율적인 경영 육성, 규모 확대** 등을 젊은 농가가 **선행**해야 할 주요 **추진과제**로 지적하고,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영 법인화**가 **중요**하다고 봄.

○ **2016년 농업 산출액**이 전년 대비 4.6% 증가한 **9조 2000억 엔**으로 2년 연속 증가하여 **16년 만**에 **9조 엔대**를 **회복**한 것을 강조 ⇒ **해외 식료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국내 농가**는 **수출**에 **대응**하기 **좋은 시기**라고 함.

언론 동향 38년 만에 발의한 개헌안 국회 의결 무산 등

※ 아젠다 발굴을 위해 농업전문지(주요 일간지 등)에 기고된 내용을 근거로 농업・농촌 관련 쟁점 및 이슈, 주요 농정현안에 대응하고자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작성하였습니다.

❑ 38년 만에 발의한 개헌안 국회 의결 무산

○ **[정부 개헌안, 정족수 미달로 국회 의결 무산, 5.24.] 국회 본회의**(5.24.)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상정**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표결에 불참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무산**※※, 이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투표 불성립'** 선언

※ 114명이 투표한 것으로 집계되어 의결정족수(의결기준인 3분의 2: 192명)에 못미침.

※※ 문재인 대통령이 3.26일 발의한 개헌안은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지만 의결 시한을 넘겨 정부 개헌안을 국회가 다시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해졌고, 다시 개헌을 추진하려면 국회 또는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라는 첫 번째 절차부터 다시 시작해야함.

아젠다 발굴

- **(청와대)**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투표 불성립'** 된 것에 대해 **유감**, 개헌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쳐 앞으로 새로운 개헌의 동력을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 그래도 정부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취지**가 **국정운영**에 **반영**되도록 노력

- **(국회 사무처)** 이번 개헌안이 표결 과정을 통해 부결된 것이 아닌 만큼 **20대 국회 종료 시까지 계류**※된다는 입장

  ※ 반면, 이번 개헌안을 다시 논의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계류가 아니라 사실상 폐기라는 입장도 적지 않음.

자료: "정부 개헌안, 정족수 미달로 국회 의결 무산…폐기 수순" (KBS, 2018.5.24.), " '38년 만에 발의' 대통령 개헌안, 역사 속으로" (SBS, 2018.5.24.), " '38년 만에 발의' 대통령 개헌안, 역사 속으로" (연합뉴스, 2018.5.24.), "국회 개헌안 처리 관련 논평" (청와대, 2018.5.24.)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정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 5.2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을 **통과**※, 올해 월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157만 원**을 기준으로, **25%**인 **39만 원**을 **넘는 상여금**과 **7%**인 **11만 원**을 **초과**하는 **복리후생비**가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시킨 데 대해 **노동계**가 강력 **반발**

  ※ 5.24일 오후 10시부터 5.24일 오전 2시까지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개정 최저임금법을 의결하고 개정안을 처리

- **(노동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개정안에 복리후생 수당까지 포함되면서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 **저임금 노동자**의 **손실 불가피**하며, **최저임금 인상 효과 무력화** 주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5.28일 본회의 통과 저지 총파업 결의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5.25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키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며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형선고이며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대한 폐기 선언"이라고 강하게 반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5.25일 성명서를 통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시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시켰다"며 "특히 식대·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켜 저임금 노동자에게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혀

아젠다 발굴

▌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주요 내용▐



자료: "노동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강력 반발" (YTN, 2018.5.25.), "노동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에 반발… '최악의 전면개악' '사형선고' " (동아일보, 2018.5.25.), " '최저임금 개정안 통과' 에 노동계 강력 반발" (머니투데이, 2018.5.25.), "최저임금에 복리후생 수당도 포함…쟁파업 카드 꺼낸 노동계(종합)" (연합뉴스, 2018.5.25.)

통계·조사 2017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

자료 : 통계청(2018.5.25.)

❑ 개요

○ [통계청, 「2017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 발표, 5.25.] 양축농가의 경영개선 및 축산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 (조사기간) 2017.1.1.~2017.12.31. / (조사대상 및 표본농가수) 7개 축종, 1,400가구

❑ 조사 결과

○ [2017년 축산물생산비] 육계를 제외한 모든 축종에서 전년 대비 증가

- (증가) 계란(14.7%↑), 비육돈(6.3%↑), 육우(5.6%↑), 송아지(3.3%↑), 비육우(2.2%↑), 기축비(비육돈,계란), 노동비, 영농시설비 상승에 기인
- (감소) 육계 0.5%↓, 사료가격 하락에 기인

▌축산물 생산비 현황▐

구 분 / 축종별	2016		2017		전년 대비			
					증감		증감률(%)	
	경영비	생산비	경영비	생산비	경영비	생산비	경영비	생산비
송아지 (천 원/마리)	2,100	3,121	2,164	3,225	64	104	3.0	3.3
한우비육우(천 원/100㎏)	866	996	879	1,018	13	22	1.6	2.2
육 우 (천 원/100㎏)	517	621	524	656	7	35	1.4	5.6
우 유 (원/ℓ)	646	760	650	767	4	7	0.7	0.9
비육돈 (천 원/100㎏)	255	267	272	284	17	17	6.5	6.3
계 란 (원/10개)	922	974	1,062	1,117	140	144	15.2	14.7
육 계 (원/㎏)	1,183	1,244	1,179	1,237	-4	-7	-0.3	-0.5

○ [2017년 축산물 순수익] 소축종은 축산물 판매가격 하락에 기인하여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돼지 및 닭축종은 축산물 판매가격 상승에 기인하여 증가

▌축산물 수익성 현황▐

구 분 / 축종별	2016			2017			순수익 전년 대비	
	총수입	소 득	순수익	총수입	소 득	순수익	증감	증감률
한우번식우 (천 원/마리)	2,617	1,025	266	2,563	998	234	-32	-11.9
한우비육우 (천 원/마리)	8,458	1,962	988	7,805	1,176	133	-855	-86.6
육 우 (천 원/마리)	4,319	582	-174	3,850	13	-953	-778	-
젖 소 (천 원/마리)	10,069	3,881	2,844	9,998	3,809	2,747	-97	-3.4
비육돈 (천 원/마리)	383	94	82	407	99	86	4	4.8
산란계 (원/마리)	30,260	3,296	1,815	42,399	13,302	11,814	9,998	550.8
육 계 (원/마리)	1,833	109	21	1,946	234	149	128	619.3

2018년 기금평가 결과

자료 : 기획재정부(2018.5.21.)

개요

○ [기획재정부, 「2018년 기금평가※ 결과 국무회의 보고, 5.21.] 기획재정부는 기금평가단의 기금 자산운용평가(46개 기금), 기금 존치평가(34개 기금) 결과를 5.21일 국무회의에 보고

※ 기금평가제도: 기금평가는 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라 매년 기금의 자산운용 실태와 존치 여부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써, 기금 자산운용평가와 기금 존치평가로 구성, △기금 자산운용평가는 기금의 여유자산 운용 실태를 평가하고, △기금존치평가는 기금의 존치타당성, 기금사업 및 재원구조의 적정성을 평가

평가 결과

○ [2017회계연도 기금 자산운용평가 결과]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이 '탁월' 등급으로 평가

- (평가 대상) 고용보험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46개 기금※, 국민연금은 별도 평가지침으로 평가 실시

※ 매년 평가하는 공공기관경영평가 대상 기금(20개), 여유자금 1조 원 이상 기금(4개)과 격년으로 평가하는 기금(22개)

▌2018년 기금 평가 대상(자산운용평가) ▐

구 분		기금명
매년 평가 (24개)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 (20개)	국유재산관리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언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무역보험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국민연금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여유자금 규모 1조 원 이상(4개)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주택도시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격년 평가(22개)		국민건강증진기금, 국제교류기금, 군인복지기금, 군인연금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남북협력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범죄자피해보호기금, 보훈기금, 사학진흥기금,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양성평등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응급의료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청소년육성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2018년 평가기금(46개)		–
전년도 평가 기금(14개)		–
평가 제외 (7개)	계정성 기금 (4개)	공공자금관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신설 기금※ (3개)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전체 기금(67개)		

※ 신설 기금은 3년간 평가 유예, 음영은 자산운용평가 및 존치평가 중복기금

통계·조사

○ [2018년 기금존치평가 결과] 고용보험기금 등 32개 기금은 존치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었나,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조건부존치로 평가하고 제도개선 등을 권고

- (평가 대상) 농지관리기금, 복권기금 등 34개 기금※

※ 매년 전체기금의 1/3씩 평가(개별사업의 적정성, 재원구조의 적정성, 기금존치의 타당성)

〈2018년 기금평가 대상(기금존치평가)〉

◈ 농지관리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축산발전기금,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외국환평형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복권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 원자력안전규제계정),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국제교류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사학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연금기금, 응급의료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무역보험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 부담금 평가시기 일치를 위해 13개 기금 추가(음영)

○ [향후 계획] 기금평가 결과는 5월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등에 활용※※할 예정, 또한 기금평가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

※ (국가재정법 제82조 3항) 기획재정부 장관은 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 기금 자산운용평가 →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상·하위 1/3 기금의 기금 운영비 증액·삭감에 활용 / 기금 존치평가 → 기금운용계획안 수립에 활용

※※※ 기금평가단에서 제시한 권고사항 등이 기금운용에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평가 결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평가단 구성 시기를 2월 말 → 전년 12월 말로 앞당겨서, 활동기간을 3개월 → 5개월로 확대하는 등 평가단 운영도 내실화할 예정

▌2017회계연도 기금 자산운영평가 결과▐

등급	구분	기금명
탁월 (7개)	사회보험성	
	금융성	
	사업성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우수 (10개)	사회보험성	
	금융성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사업성	국유재산관리기금, 국제교류기금, 남북협력기금, 군인복지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양호	사회보험성	고용보험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통계·조사

등급	구분	기금명
(21개)	금융성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사업성	대외경제협력기금, 사학진흥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언론진흥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양성평등기금, 보훈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보통 (6개)	사회보험성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군인연금기금
	금융성	
	사업성	주택도시기금, 응급의료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미흡 (0개)	사회보험성	
	금융성	
	사업성	
아주미흡 (1개)	사회보험성	
	금융성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사업성	

※ 국민연금 자산운용 평가제도를 개선(2015.8월)함에 따라, 국민연금은 별도의 평가지침으로 평가

▌2018년 기금 존치평가 결과: 기금사업 적정성 ▐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예산(백만 원) 2017년	예산(백만 원) 2018년	평가 결과
고용노동부	장고기금	장애인취업지원	8,463	8,380	〈 복지부 사업 일부 → 고용노동부 이관〉 ※ 목적(취업지원), 대상 (장애인), 방식(취업알선, 적응지원) 등이 유사 · 중복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18,709	18,939	
농림축산식품부	농안기금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16,436	24,527	〈 농특회계사업 → 농안기금 이관 〉 ① 완료 사업인 대전, 천안 도매시장의 유통효율화 등 사업 성과에 대한 검증 부족 ② 두 사업은 연계(산지출하 – 도매단계) 추진 시 성과제고가 가능한 사업으로 재원여건을 감안하여 농안기금에서 추진
	농특회계	농산물공동출하 확대지원	22,668	22,668	
고용노동부	장고기금	장애인고용장려금	164,095	199,262	〈 공공기관에 대한 장려금 폐지 〉 장려금 지급은 인센티브 성격 → 공공기관의 경우, 경평시 장애인고용 등 사회적가치에 대한 비중 강화(5점 → 22) → 별도의 장려금 지급은 이중 지원으로 제도운용의 실익이 낮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진기금	우수과학자 포상	2,104	2,104	〈 포상금 지급 폐지 〉 ① 과진기금 부채 과다 → 사업구조조정 필요 ② 포상금 지급 폐지 → 연구비 차등 지급 및 명예부여 등 실질적 지원 방식으로 변경
고용노동부	고보기금	취약계층 취업지원	24,621	10,883	〈 협업을 통한 연계 지원 → 노숙인의 일을 통한 자립 지원 〉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노숙인등의 복지 지원	34,565	36,095	

통계·조사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예산(백만 원)		평가 결과
			2017년	2018년	
고용노동부	근복기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5,047	4,692	〈 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 유도 〉 ※ 집행률: (2015) 2.6% → (2016) 34.2 → (2017) 58.2
고용노동부	근복기금	문화예술제	503	504	〈 참가대상 확대: 가요제, 영화제 등 → 체육행사 등 〉 더 많은 다양한 근로자 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사업성과 제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안기금	비축지원	599,333	564,287	〈 비축시설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고 쌀 처리 방안 마련 〉
농림축산식품부	농안기금	비축기지 현대화 및 광역화	16,480	7,232	〈 비출기지의 입출고 상황과 저장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필요 → 비축관리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
농림축산식품부	농안기금	종자수매공급	65,641	60,223	〈 성과지표 대상을 다양화하여 성과 제고 〉 벼 → 벼, 보리, 콩, 밀 등
금융위원회	농어가목돈마련기금	저축장려금 지급	83,097	81,379	〈 농어가 재산형성을 위한 근원적인 대책 마련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소득보전직불기금	쌀소득변동직접지불	1,490,000	1,080,000	〈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 필요 〉
고용노동부	산재기금	근로자 건강보호	22,151	22,736	〈 근로자건강센터와 분소 간의 연계 운용 등을 통한 취약근로자 건강관리 강화 〉 ① 분소에서 화상상담 등 센터와의 연계 강화 ② 산업단지 특화 건강서비스 제공 및 찾아가는 서비스 활성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축발기금	축산물 수급관리	103,192	73,760	〈 원유 등 축산농가의 소득 지지뿐 아니라 소비자의 물가 부담 완화도 노력할 필요 〉 ①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2013.6월~)운영 내실화 ※ 소비자단체 · 생산자단체 · 유통업계 · 학계 등 참여 ② 축산물 수급 · 가격동향 모니터링 강화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축발기금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지원	9,161	6,000	〈 실집행 및 민간의 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 반영 등 필요 〉 ※ 2017년 실집행률 13.8% 구분 / 2015 / 2016 / 2017 목표 / 20개소 / 20개소 / 13개소 달성 / 4개소 / 7개소 / 5개소

2017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자료 : 보건복지부(2018.5.24.)

❑ 개요

○ [보건복지부, 「2017년 노인복지실태조사 결과」 발표, 5.24.] 노인의 가구형태 및 가족관계, 소득·건강·기능상태, 생활환경 및 가치관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 2008년 노인복지법에 근거가 마련된 후, 네 번째※로 실시되었으며, 노인의 실태와 정책 효과 등을 파악하는 데 활용

※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2017년 노인실태조사 개요〉

◈ (조사대상) 전국 934개 조사구의 거주노인 1만 299명 대상, 면접조사
◈ (조사기간) 2017.4월 ~11월
◈ (조사내용) 가구형태 및 가족관계, 소득, 건강·기능상태, 경제활동 및 여가·사회 활동실태, 생활환경 및 가치관 등
◈ (조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사 결과

1 노인의 일반적 특성: 고령노인 증가, 학력수준 향상

○ [연령구성] 지난 10년간 65세 이상 노인 중 80세 이상 노인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2008: 16.0% → 2014: 20.6% → 2017: 21.7%), 평균연령도 74.1세로, 2008년 72.9세, 2014년 73.9세에 비하여 높아져

○ [교육수준] 학력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는데, 무학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2008: 15.3% → 2014: 9.6% → 2017: 6.6%)하고, 중학교 이상자가 절반가량으로 증가(2008: 29.0% → 2014: 37.6% → 2017: 41.7%)

2 가족 및 사회적 관계: 독거 증가, 사회적 관계망의 약화

○ [가구 형태] 독거노인이 증가(2008: 19.7% → 2014: 23.0% → 2017: 23.6%)했으며, 노년기에 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2008: 32.5% → 2014: 19.1% → 2017: 15.2%)도 10년 만에 절반으로 하락해, 독거노인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단독가구 생활상의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은 44.5%로 2014년(12.7%)에 비해 크게 증가, 그러나, 85세 이상 노인과, 저소득 노인은 80% 정도가 어려움을 경험

- (단독가구 생활의 어려움) 아플 때 간호(19.0%) > 경제적 불안감 (17.3%) > 심리적 불안감 및 외로움(10.3%) 순

○ [기혼자녀와 거주 사유] "당연하다"는 규범적 이유가 크게 감소(2008: 43.4% → 2014: 15.6% → 2017: 14.8%)하고 "자녀 또는 노인의 필요로"가 많아져※ 변화한 가족관을 확인

※ 자녀가 필요해서: (2008) 23.2% → (2014) 37.8% → (2017) 42.1%

○ [사회적 관계망] 가까운 친인척, 친한 친구·이웃이 있는 경우, 비동거 자녀와 왕래·연락하는 비율 모두 낮아져 사회적 관계망이 과거보다 약해진 것※으로 나타나

※ (가까운 친인척) 2008: 56.2% → 2017: 46.2%, (친한 친구·이웃) 2008: 72.6% → 2017: 57.1%, (자녀와 왕래비율(주1회 이상)) 2008: 44.0% → 2017: 38.0%

◈ (평가) 고학력화 등 노인 가구 특성 변화에 따라 단독가구 선호 등 가족관 변화 확인
- 단독가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고령노인에 대해 돌봄을, 단독생활을 선호하는 고소득·초기노인은 일자리 등 돌봄 외 복지서비스 제공 필요

◈ (정책방향) 약화된 사회적 관계망 보완을 위해 노인복지 인프라 재평가를 통한 돌봄 확대, 노인돌봄서비스 확대 등 보호 강화(2018: 55만 명 → 2022: 63만 2,000명)

3 경제상태 및 활동: 공적이전소득 증가, 미취업자의 약 10%가 근로 희망

○ [소득구성] 노인 개인 소득의 구성 비율 중, 공적이전소득 비율이 2017년 36.9%로 가장 크며,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 이는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등의 성숙의 결과로 판단

※ 공적이전소득: 공적연금,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기타 공적급여

○ [소비] 노인은 소비 관련 항목 중 주거관련 비용(30.4%)을 가장 부담스러워하며 다음으로 보건 의료비(23.1%) > 식비(18.7%) > 경조사비(4.4%) 순

○ [경제활동 참여] 노인의 30.9%가 일을 하며, 주로 단순 노무직(40.1%), 농림어업(32.9%) 등에 종사

- 산업 구조의 변화로 농림어업 종사자 비중은 감소(2008: 60.5% → 2017: 32.9%)했으나, 급여 등이 높지 않은 단순노무 종사자 비율이 증가해(2008: 24.4% → 2017: 40.1%) 정책적 관심이 필요

- 노인의 9.4%는 현재 일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근로를 희망하였으며, 초기 노인, 고학력 노인의 희망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 [경제활동 사유※] 대부분 생계비 마련(73.0%)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그 비율은 점차 감소

※ △생계비 마련: (2008) 85.9% → (2014) 79.3% → (2017) 73.0%, △용돈 마련: (2008) 3.7% → (2014) 8.6% → (2017) 11.5%

- 고학력일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능력발휘, 경력활용 등 비경제적 사유를 위해 일한다는 비율이 높아

◈ (평가) 노인의 부동산, 자산이 증가하고, 생계를 위해 일하는 노인이 감소했는데, 일부는 공적 소득보충 확대의 효과로 해석

- 다만, 전 노인 계층에서 근로의 절대적인 사유는 아직까지 생계비 마련인 점 등을 감안해 공적소득 및 일자리 지원 강화

◈ (정책방향) ① 기초연금 인상(2017: 20만6000원 → 2018.9: 25만 원 → 2021년: 30만 원), ②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018.10월), 노인에 대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부양의무 적용 완화(2017.11월부터 단계적 적용) 등 소득 지원 강화, ③ 노인일자리 수당 인상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2017: 46만 7,000개 → 2018: 51만 개)

4 건강 및 보건의료 실태: 만성질환은 증가, 건강 행위는 개선

○ [만성질환] 89.5%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평균 만성질환은 2.7개로 2008년(1.9개)에 비해 증가(3개 이상 만성질환보유자 30.7% → 51.0%)

○ [건강 행태] 흡연율 10.2%, 음주율 26.6%, 운동실천율 68.0%로, 과거에 비해 노인의 건강 행위는 긍정적으로 개선

- 건강검진 수진율 82.9%, 치매검진 수진율은 39.6%로 건강검진에 비해 낮게 나타나

○ [우울증상※] 21.1%는 우울증상이 있으며, 6.7%가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 중 자살을 시도한 응답자는 13.2%

※ 단축형 노인우울척도(Geriatric Depression Scale: GDS-K)로 우울증상 측정

○ [인지기능※] 응답자의 14.5%가 인지기능 저하자로 나타났고, 고연령, 무배우자, 읍면지역에서 인지기능 저하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 치매선별용 한국어판 간이정신상태 검사(MMSE-DS) 활용

◈ (평가) 고연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 관리를 강화하고, 고연령자·저소득자 대상 우울, 치매 등 집중 지원 필요

◈ (정책방향) ① 치매 예방, 검진, 상담, 종합관리 등 치매국가책임제 실시, ② 장기요양 수급자 확대(2017: 58만 명 → 2022: 86만 명) 및 보장성 강화, ③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발표(2018.1월), ④포괄적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체계 구축(2017.하반기~)

5 여가 및 사회활동: 활동적 노인 증가, 낮아지는 경로당 이용율

○ [여가활동] TV 시청(99.3%) > 산책(27.5%) > 스포츠 참여(16.6%) > 화초 텃밭 가꾸기(12.0%) 순으로 스포츠※, 산책 등 적극적인 야외 활동이 증가해 활동적인 노인이 증가

※ 스포츠 참여: (2014) 10.2% → (2017) 16.6%

○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의 23.0%가 경로당※(6만 5000개)을, 9.3%가 노인복지관(352개소, 2016년 말 기준)을 이용, 경로당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2008: 46.9% → 2017: 23.0%), 읍면부에서는 48.5%로 동부와 큰 차이(11.5%)가 있었음.

※ △경로당 이용 사유: 친목도모(91.4%), 식사서비스(57.2%)가 많으며, △노인복지관: 취미여가(49.6%) > 친목도모(42.3%) > 식사서비스(27.5%) 순

○ [사회활동] 평생교육(복지관·평생교육원 등) 참여율은 12.9%,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3.9%

6 노인의 생활환경 및 안전실태: 시설 입소보다 재가 선호, 운전 증가

○ [주거환경] 노인의 약 79%는 현재 주거지에 만족하며, 불만족 사유는 주로 주방, 화장실, 욕실 사용 불편

○ [희망 주거지] △노인의 88.6%는 건강할 때 현재 집에서 거주하기를 원해, △57.6%가 거동이 불편해져도 재가서비스를 받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 △31.9%는 돌봄, 식사, 생활서비스가 제공되는 노인요양시설 등 희망하며 △90% 이상의 노인이 유료 서비스 이용 욕구가 있었음.

○ [운전] 운전을 하는 노인은 18.8%로 2011년(12.2%)보다 증가했으며, 운전을 그만둔 연령도 62.1세로 전보다 높아졌지만(2011년 57.7세), 운전 중인 노인의 11.1%가 시력 저하, 판단력 저하, 반응속도 저하 등으로 운전 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

◈ (평가) 노인 대부분 친숙한 현재 거주지에서 노후를 보내기를 희망하나, 열악한 주거환경, 부족한 재가서비스 등 어려움 존재

◈ (정책방향) ① 장기요양에 통합재가급여 신설, 신규 재가서비스(이동지원 등) 도입 검토, ② 고령자 복지주택에 무장애주택 설계 적용, 주택 수리지원 및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 설치, 공공실버주택 확대(국토교통부), ③ 고령운전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활성화(도로교통공단)

7 노후생활 등에 대한 인식: 연명치료 반대, 노인 기준은 70세 이상

○ [연명치료] 노인의 91.8%(2014년 88.9%)가 연명치료에 반대해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

통계·조사

○ [희망하는 장례 방법] 화장을 선호하는 비율이 2008년 45.6%에서 2017년 71.5%로 크게 증가해 변화한 장례문화를 반영

○ [노인 연령에 대한 인식] 86.2%가 노인의 연령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생각(2008년 68.3%)

○ [지하철 무임승차] 현행 유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67.6%)이 다수이나, 매우 동의(11.7%)보단 동의(55.9%)가 많아 소극적 찬성이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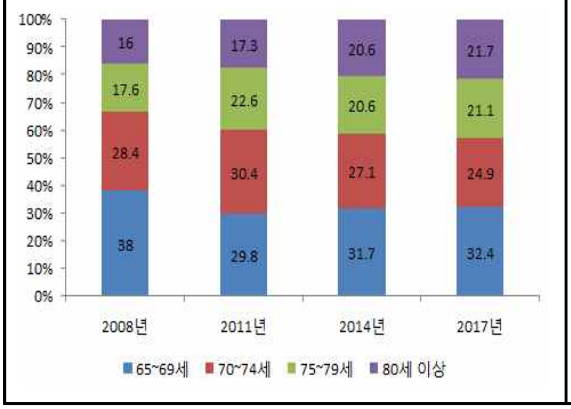
- 무임승차에 대해 중립 또는 부정적인 노인은 제도 개편 시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정'(86.6%)을 '운임 일부 본인부담'(67.1%)보다 선호

○ [노년기 부양관]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은 "본인과 국가가 준비"(33.7%) > "본인 스스로"(34.0%) > "국가 차원"(14.1%)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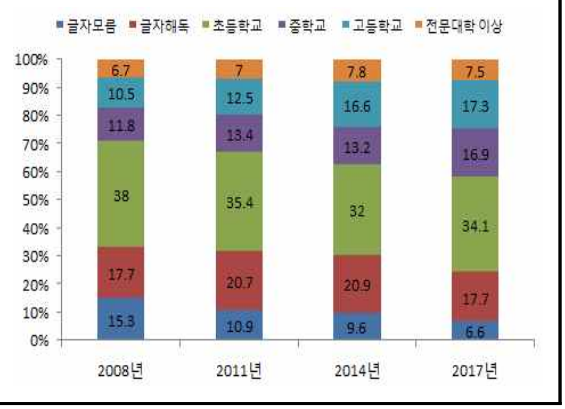
◈ (평가) 장례, 연명의료결정제도, 경로 우대 등 사회적·정책적 이슈에 대한 노인들의 변화한 의식 확인

◈ (정책방향) ① 화장시설 및 자연장 활성화, ② 연명의료결정제도 지속 추진, ③ 노인들의 변화된 의식을 반영해 노인 당사자 참여를 바탕으로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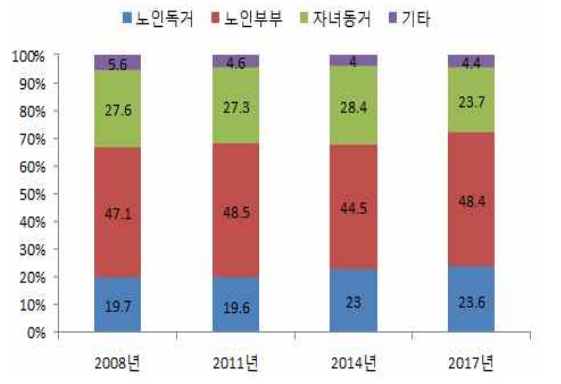
〈연령구성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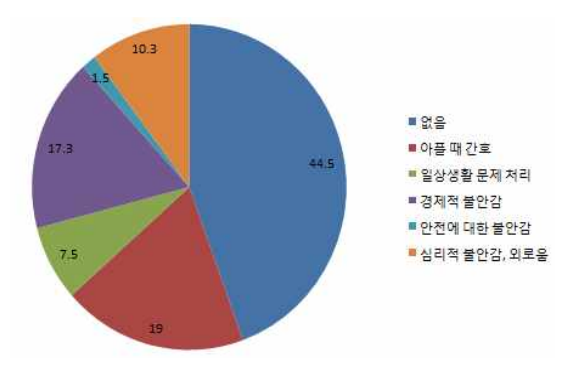
〈교육수준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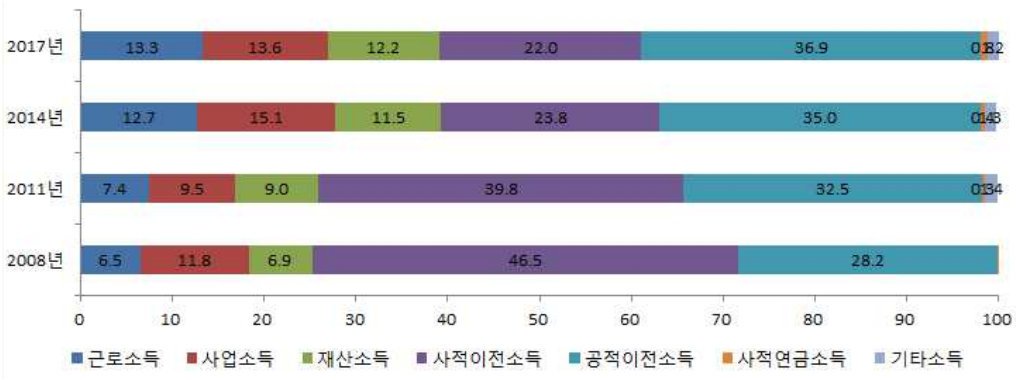
〈거주형태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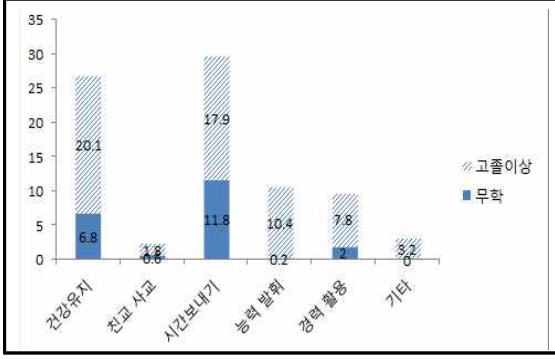
〈단독가구 생활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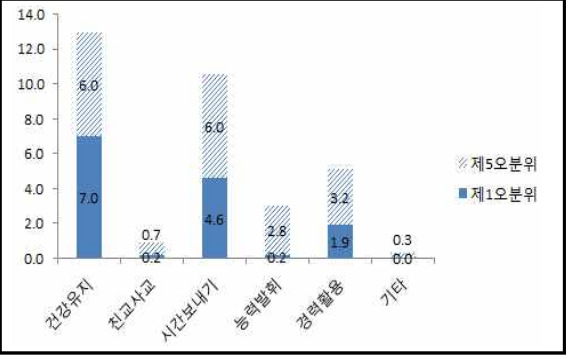
▌노인의 개인소득원별 구성 비율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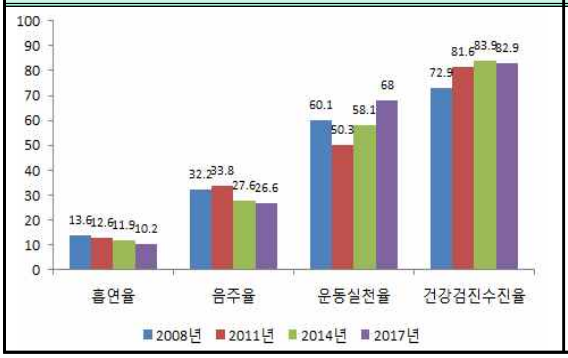
〈비경제적 사유로 일하는 비율: 학력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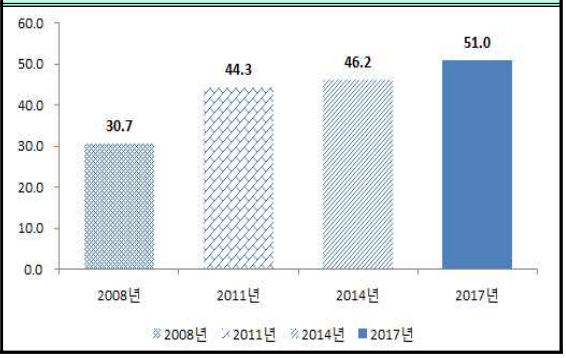
〈비경제적 사유로 일하는 비율: 소득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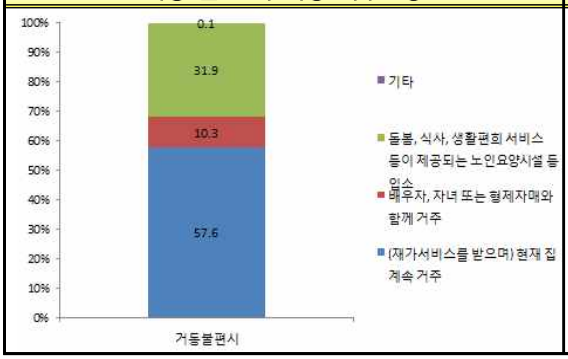
〈노인의 건강행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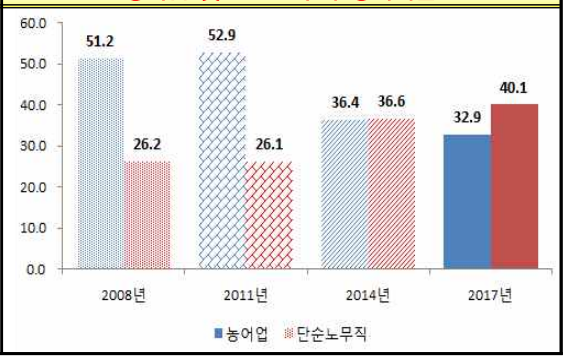
〈만성질환 3개 이상 보유율〉



〈거동 불편 시 희망 거주환경〉



〈농어업 및 단순노무직 종사비율〉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